

행정학
해설위원 : 이명훈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수탁 7급 행정학 역시 이명훈 하이패스
행정학에서 100% 적중하였습니다.

문 1.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지지 ㄴ.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
ㄷ. 현실 적합성의 추구 ㄹ. 참여의 강조

- ① $\neg$, $\perp$
② $\perp$, $\sqsubset$
③ $\neg$, $\perp$, $\sqsubset$
④ $\perp$, $\sqsubset$, $\sqsupset$

[정답] ④ 신행정론은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행정행태론을 비판하고 등장한 행정이론이다(ㄱ). 신행정론은 현실 적합성 있는 행정연구를 지향하며, 사회적 형평성 가치와 시민참여를 강조한다.

<<핵심체크>> 신행정론(하이패스 행정학 p95)

개념	전통적 행정이론이 사회문제해결능력이 없음을 비판하고 행정의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 정책지향, 행정학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이론적 정향
대두배경	• 현실적 배경 - 사회적 격동기의 급박한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 • 이론적 배경 - 행태주의가 사회문제해결능력이 없음을 비판하고 등장
전개	• Waldo 주도하에 시라큐스대학 주최의 미노브록 회의에서 주창됨 • Marini는 회의의 내용을 정리하여 「신행정학을 지향하며」라는 저서를 발간함
이념	사회적 형평성과 고객에의 대응성
정책	정책지향적 접근으로 정책학의 발전에 기여
조직	계층제를 비판하고 민주적 조직설계를 위한 탈관료제 지향
인사	행동주의적 행정인인 적극적 행정인 중시
통제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통제 중시
연구방향	순수과학적이기보다는 응용과학적, 서술적이기보다는 처방적, 기관지향적이기보다는 수익자지향적, 가치중립적이기보다는 가치지향적, 과학적이기보다는 철학적
학문적특징	• 행정의 적실성, 기술성(처방성), 문제지향성 강조 • 행태주의(논리실증주의)의 지양과 규범주의 추구 • 과학적 연구의 배경이 아닌 과학적 지식의 활용 강조 • 행정학의 정체성 극복(Waldo - 전문직업주의 확립)

문 2. 공익(public interest)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체설은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 보다는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다.
- ② 실체설에서 인식하는 공익개념의 구체적 내용은 도덕적 절대 가치, 정의, 공동사회의 기본적 가치 등으로 다양하다.
- ③ 과정설에는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 ④ 과정설에는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 공익이 보장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정답] ① 실체설은 부분적이고 특수한 이익인 사익보다는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다.

<<핵심체크>> 공익실체설과 공익과정설(하이패스 행정학 p144)

공익 실체설	의의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적·규범적·도 덕적 개념
-----------	----	--

공익 실체설	근거	① 도덕적·규범적 실체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총효용극대화), 정의(형평), 자연법 등 개별특수이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사회 전체로서의 공동선이자 국가이익 존재 ② 공유지의 비극 극복을 위한 규칙 등 사익집합 이상의 공익 존재 ③ 공동체실체설에 근거한 공익실체설 : 공익이란 특정시대의 통치자가 정한 공동체 스스로의 의지와 욕구(신비주의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공동체론)
	특징	① 집단주의 이론(공익우선주의), ② 엘리트이론(비민주적 공익관), ③ 사법부 관례의 기준 :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함.
	비판	① 개인의 인권을 유린했던 전체주의의 이론적 근거 ② 소수 엘리트의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 가치로 전환시켜주는 비민주적 공익관 ③ 지나친 추상성 및 이념적 경직성(신축성과 융통성 부족)
공익 과정설	의의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
	근거	이익집단론적 과정설
	특징	① 절차적 공익관, ② 민주적 공익관, ③ 정책과정의 합리화 중시(강한 이익집단에 의해 희생되기 쉬운 약자·대중·미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 대표관료제 도입 중시)
	비판	① 대립되는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제시 곤란 ②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으로 잠재집단의 이익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 반영 곤란 ③ 민주적인 토의, 협상, 경쟁이 발달하지 못한 신생국에 적용 곤란

문 3. 정책네트워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로즈와 마쉬(Rhodes & Marsh)에 따르면, 이슈네트워크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반면 정책공동체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다.
- ②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이슈 네트워크모형을 제안했다.
- ③ 많은 학자들은 1960년대에 등장한 하위정부모형이나 1970년대에 등장한 이슈네트워크모형이 정책네트워크모형의 기원이라고 본다.
- ④ 정책공동체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며 참여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교환관계이다.

[정답] ① 로즈와 마쉬(Rhodes & Marsh)에 따르면,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네트워크인 반면,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이다.

<<핵심체크>>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하이패스 행정학 p282)

구 분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참여의 특징	폐쇄적이며 제한적 참여	광범위하며 개방적인 참여
주요 참여자	정부관료, 전문가, 학자, 국회의원 보좌관, 신문기자, 연구원(단순한 이해관계자 배제)	관련된 모든 이익집단, 전문가, 개인, 언론 등(단순한 이해 관계자 참여)
참여자간의 권한과 자원배분	모든 참여자가 상호교환 할 수 있는 권한 및 자원을 보유하며 참여자간에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공유함	참여자의 일부만 자원 및 권한을 보유하며 상황에 따라 중요한 자원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주도적 행위자도 변함
참여자간의 관계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이며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이며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
권력과 게임의 유형	참여자 간의 권력이 균형적이며 positive sum game(non zero sum game)이 이루어짐	참여자간의 권력이 불균등하며 negative sum game(zero sum game)이 이루어짐
상호 작용	안정적이고 질서적이며 상호작용이 빈번함	불안정적이고 무질서하며 접촉의 빈도가 가변적임
정책산출	의도한 대로 정책산출이 가능하므로 예측이 용이하며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가 유사	결정과정에서 정책내용이 변동하므로 정책산출의 예측이 곤란하며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가 상이

문 4.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일반대중의 관심과 주의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지만, 정부가 문제 해결을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문제(social problem)
- ②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 ③ 공중의제(public agenda) 또는 체제의제(systemic agenda)
- ④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 또는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

[정답] ③ 설문은 공중의제 또는 체제의제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체크>> 정책의제설정과정(하이패스 행정학 p284)

사회문제	개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로, 사회 내에서 최초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사회이슈(사회문제)	집단들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로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여론이 환기되는 단계(주도자와 접화장치가 있어야 사회적 이슈화가 용이함)
체제(공중, 토의, 환경)의제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로 제도의제보다 포괄적임
제도(공식, 행동, 정부)의제	정부가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로 체제의제에 비해 구체적임

문 5.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②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②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을 금지한다.

<<핵심체크>>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하이패스 행정학 p252)

네거티브 규제	의의	•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형태를 지닌 규제 •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음
	형식	'~할 수 없다', '~가 아니다'
포지티브 규제	의의	•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형태를 지닌 규제 •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 금지
	형식	'~할 수 있다', '~이다'
평가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민간행위자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의 행정비용을 감소할 수 있음	

문 6. 매틀랜드(Matland)가 모호성(ambiguity)과 갈등(conflict)이라는 두 차원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정책집행상황 중에서,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갈등은 매수(side payment)나 담합(logrolling)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 ②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이 중요해진다.
- ③ 정책집행과정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조직 외부의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 ④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목표의 해석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답] ④ 매틀랜드(Matland)에 따르면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치적 집행이 이루어진다. 정치적 집행상황에서는 정책목표는 명확한 반면 갈등이 높아 매수나 담합 등의 행태가 나타나며,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강압적·보상적 수단이 증시된다. 또한 집행조직 외부의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과정이 목표의 해석 과정으로 이해되는 경우는 모호성과 갈등이 모두 높은 상징적 집행 상황이다.

<<핵심체크>> 매틀랜드(Matland)의 정책집행 유형(하이패스 행정학 p367)

구 분		갈 등	
		낮 음	높 음
모호성	낮 음	관리적 집행 (하향적 접근이 유용)	정치적 집행
	높 음	실험적 집행	상징적 집행 (상향적 접근이 유용)

문 7. 바스(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에 관심을 가지며 잠재력 개발을 돕는다.
- ② 리더는 성과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에 기반한 관리방식을 활용한다.
- ③ 리더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구하도록 구성원을 자극하고 변화를 유도한다.
- ④ 리더는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정답] ② 성과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에 기반한 관리방식을 활용하는 리더십은 거래적(교환적) 리더십이다.

<<핵심체크>>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하이패스 행정학 p544)

비교 기준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가치	능률 지향	환경에의 적응 지향
변화관	안정 지향(소극적)	변화지향(적극적)
환경관	폐쇄체제적 접근	개방체제적 접근
개혁관	점진적·단기적·현실지향적 접근	급진적·장기적·미래지향적 접근
대상	중하위직 관리자	최고 관리자
욕구충족	하위욕구(경제적·사회적 욕구)	상위욕구(자아실현적 욕구)
의사소통	일방적·하향적·수직적	다방향적
조직구조	기계적 구조(관료제)에 적합	유기적 구조(탈관료제)에 적합
관리전략	리더와 부하 간의 교환(거래) 및 리더의 통제에 의한 관리(지시와 지원)	카리스마, 비전 공유,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를 통한 관리(통합형 관리)

문 8.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서 간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을 수직적 분화라고 한다.
- ②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시설과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③ 공식화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규정의 수준을 의미한다.
- ④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답] ①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서 간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을 수평적 분화라고 한다.

<<핵심체크>> 조직구조의 기본변수(하이패스 행정학 p416)

구성 요소	역할	특정 지위를 있는 자들이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나 행동의 범주			
	지위	특정인이 점하는 위치의 상대적 가치 또는 존중도			
	권한	개인 또는 조직단위의 행태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권력) 중 정당성이 인정된 권력			
기본 변수	복잡성	분화의 정도(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장소적 분산)			
	공식성	지위, 역할 및 권한의 문서화·표준화·정형화되는 정도			
	집권성	의사결정권한의 집중 정도			
상황 변수	규모	조직구성원의 수, 투입자원 또는 산출자원의 크기 등			
	기술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과정 또는 방법			
	환경	조직의 경계선 밖에 있어서 조직의 직접적인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모든 요소			
기본변수와 상황변수의 관계		구 분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
		규모가 클 때	+	+	-
		기술이 일상적일 때	-	+	+
		환경이 유동적일 때	-	-	-

문 9. 파슨스(Parsons)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유형, 그리고 각 조직유형별 예시를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적응(adaptation) 기능－교육조직－학교
- ② 목표 달성(goal attainment) 기능－정치조직－행정기관
- ③ 통합(integration) 기능－통합조직－종교단체
- ④ 잠재적 형상 유지(latent pattern maintenance) 기능－경제조직－민간기업

[정답] ② 적응기능은 경제적 조직(민간기업), 목표달성기능은 정치적 조직(행정기관), 통합기능은 통합조직(사법기관, 경찰, 정신병원 등), 잠재적 형상 유지 기능은 교육조직(학교, 종교단체 등)으로 연결된다.

<<핵심체크>> 파슨스(Parsons)의 기능에 따른 조직분류(하이패스 행정학 p405)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합기능	형상유지기능
경제적 조직 (회사·공기업 등)	정치적 조직 (행정기관·정당 등)	통합조직(사법기관, 경찰, 정신병원 등)	체제유지조직 (학교·교회·가정 등)

문 10.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graphic rating scale)에서는 연쇄효과(halo effect)가 나타나기 쉽다.
- ② 대인비교법(man-to-man comparison)은 평정기준으로 구체적인 인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평정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다.
- ③ 산출기록법(production records)은 일정한 시간당 달성한 작업량과 같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 ④ 체크리스트법(check list)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는 방법이다.

[정답] ④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는 방법은 중요사건기록법이다. 체크리스트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목록을 미리 작성해두고 평정자가 이 목록에 단순히 가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핵심체크>> 근무성적평정제도(하이패스 행정학 p647)

도표식 평정 척도법	의의	한편에는 평정요소를, 다른 편에는 각 평정요소마다 우열을 나타내는 등급을 표시할 수 있는 도표를 작성해 놓고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평정요소별로 관찰하여 등급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장점	① 일시에 다수 인원을 신속하게 평정, ② 평정표의 작성이 간단하고 평정이 용이함, ③ 평정결과의 계량화 및 통계 작성 용이 등
	단점	① 평정요소의 합리적 선정 곤란, ② 등급 간 비교기준의 모호성, ③ 평정요소 간 가치치 부여의 어려움, ④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평정 야기, ⑤ 연쇄효과 발생 우려 등
강제 배분법	의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관대화·엄격화·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평정 방법(상대평가)
	장점	관대화·엄격화·집중화 경향에 따른 평정오차 방지
	단점	역산식 평정 가능성 야기
사실 기록법	의의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
	유형	산출기록법, 주기적 검사법, 근태기록법, 가감점수법 등
서열법	의의	피평정자 간의 근무 성적을 서로 비교해서 서열을 정하는 방법
	장점	특정 집단 내의 전체적인 서열을 알려 줄 수 있음.
	단점	비교적 작은 집단에만 사용 가능, 다른 집단과 비교 곤란 등
체크 리스트 평정법	의의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평정자가 이 목록에 단순히 가부를 표시하게 하여 피평정자를 평가하는 방법(프로브스트식 평정법)
	장점	평정요소가 명확하게 제시되므로 평정 용이
	단점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항목을 만들기 어렵고 질문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곤란을 겪게 됨
강제 선택법	의의	비슷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기술항목의 조 가운데 피평정자의 특성에 가까운 것을 강제적으로 골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강제 선택식 체크 리스트법)
	장점	평정자의 편견이나 정실을 배제할 수 있음.
	단점	피평정자와 전혀 관계가 없거나 모든 항목이 다 관계있는 경우에도 그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점, 평정자도 각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피평정자의 평정에 관하여 상의하기 어렵다는 점 등

중요 사건 기록법	의의	피평정자의 근무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거나 또는 중요 사건들에 대한 설명구를 미리 만들어 평정자로 하여금 해당되는 사건에 표시하게 하는 평정 방법
	장점	피평정자와의 상담을 촉진하여 피평정자의 행태개선에 기여한다는 점, 근접오류 방지 등
	단점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위험성, 상호비교가 곤란하다는 점 등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	의의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주요 과업을 선정하여 각 과업분야별로 가장 이상적인 과업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식(중요사건기록법과 도표식평정척도법의 결합)
	장점	평정척도 설계과정에서 평정 대상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
	단점	평정 대상자의 가장 대표적인 행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행태 관찰 척도법	의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의 상호 배타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한편에는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사례를 제시하고 (평정항목) 다른 한편에는 사건의 빈도수를 표시하는 척도로 구성하는 방식(행태기준평정척도법과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결합)
	장점	평정자의 주관을 줄일 수 있음
	단점	등급과 등급 간의 구분 모호, 연쇄효과가 발생 우려 등

문 11. 교육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실제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으로서, 주로 관리자훈련에 사용되는 교육방식은?

- ① 멘토링(mentoring)
- ②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 ③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 ④ 워크아웃 프로그램(work-out program)

[정답] ③ 설문은 액션러닝에 대한 것이다.

<<핵심체크>> 역량기반 교육훈련의 구체적 방법(하이패스 행정학 p639)

멘토링 (mentoring)	조직 내에서 직무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멘토가 일대일 방식으로 멘티를 지도함으로써 조직 내 업무 역량을 조직에 배양시킬 수 있는 학습활동
액션러닝 (action learning)	교육생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패의 위험을 갖는 실제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동시에 문제 자체와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방식
워크아웃 (work-out) 프로그램	조직의 수직직수평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집단 토론을 통해 행정혁신을 추구하며,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교육훈련방식
학습조직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의 학습과 개발을 촉진하여 지식의 창출 및 공유와 상시적 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가는 조직

문 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② 강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④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강임이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었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체크>> 공무원의 징계(하이패스 행정학 p682)

정징계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6개월 간 승진·승급이 제한)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1/3을 감함(12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중징계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 2/3을 감함(18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함
	해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퇴직금엔 영향이 없으며 3년 이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음(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8 ~ 1/4를 감함)
	파면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 ~ 1/2을 감하고 5년 이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음(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함)

문 13.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획예산제도(PPBS)는 계획(plan)－사업(program)－예산(budget)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한다.
- ②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원칙적으로 정부사업과 예산항목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는 예산제도이다.
- ③ 목표관리예산제도(MBO)는 참여를 통해 설정한 세부사업의 목표를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 ④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한다.

[정답] ④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는 투입중심의 예산제도로 산출이나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하는 예산제도는 신성과주의 예산이다.

<<핵심체크>> 품목별 예산제도(하이패스 행정학 p752)

개념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제도(통제중심 예산)
발달	‘능률과 절약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Taft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1920년대 연방정부에 도입
편성	인건비(기본급, 수당 등), 물건비(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등으로 편성되며, 우리나라 예산편성과목 중 목(目)에 해당
특징	① 통제지향적 예산, ② 투입 중심 예산, ③ 점증주의적 예산, ④ 상향적·미시적 예산, ⑤ 다른 예산제도와 병용되어 활용, ⑥ 통제책임의 집중화
장점	① 재정민주주의의 확립에 기여, ② 회계책임의 명확화 : 관료통제 용이, ③ 편성의 능률성 : 간편한 예산편성, ④ 자원배분시 적은 마찰과 갈등 : 예산삭감시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받음, ⑤ 인사행정에 대한 유용한 자료와 정보제공, ⑥ 비능률적 지출이나 초과지출 억제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절약, ⑦ 지출항목의 일목요연성, ⑧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유용한 자료제공
단점	① 예산집행상의 신속성 결여, ② 정부활동 파악의 어려움, ③ 정책의 우선순위 파악의 어려움, ④ 성과(산출과 결과)파악의 어려움, ⑤ 동조과잉과 번문욕례 야기, ⑥ 자원낭비의 우려, ⑦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파악 곤란, ⑧ 부서 간의 상황차이 무시, ⑨ 신규사업 창안의 어려움, ⑩ 계획과 예산의 연계 미흡

문 14.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 ③ 예산안은 세출예산법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된다.
- ④ 「국회법」에서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① 우리나라의 예산심의는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오답정리>>

-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예산안은 법안의 형식이 아닌 예산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된다.
- ④ 「헌법」에서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예산심의과정(하이패스 행정학 p780)

의의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검토하고 의결하여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
기능	① 정책형성 기능, ② 행정부의 감시·통제기능, ③ 당파적 이익이나 지역적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 ④ 한정된 가용자원의 합리적 배분 수단
한계	• 한계적 조정과 수동적 역할 : 정책이나 사업의 근본적 변경보다는 예산금액의 한계적 조정에 치중 : 대부분 1% 내외에서 수정됨 • 선행성과 점증성 : 국회의 예산 승인액과 다음연도 행정부의 예산요구액 간에는 선행적 함수관계를 이룸
절차	① 국정감사 ⇒ ② 대통령의 시정연설 ⇒ ③ 상임위의 예비심사 ⇒ ④ 예결위의 종합심사 ⇒ ⑤ 본회의 의결(「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특징	•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서 예산심의가 보다 엄격함 • 단원제보다는 양원제에서 예산심의가 보다 엄격함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증가나 새 비목을 설치하지 못함. 또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함(정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폐자삭감권만 지님) •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팽창지향적 속성을, 예산결산특별위의 종합심사는 감축지향적 속성을 지님 •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예산심의는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 예결위의 종합심사가 중요함

문 15.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 ④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핵심체크>> 예산집행의 신속성 확보 방안(하이패스 행정학 p787)

제 도	특 징
총액 예산	대학지원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일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명확성의 원칙의 예외)
이 용	입법과목(장·관·항) 간의 상호용통으로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재부장관의 승인 등을 거쳐 이용할 수 있음(한정성의 원칙의 예외)
전 용	행정과목(세항·목) 간의 상호용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음(한정성·사전의결의 원칙 예외)

제 도	특 정
이 체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변화로 인하여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중앙관서 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재부 장관이 예산을 변동시키는 것(한정성·사전의결의 원칙 예외)–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음
이 월	① 의의 :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 ② 종류 : 한정성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음 ③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자금 ④ 사고이월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에 한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자금(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 ③ 재이월 허용 여부 : 명시이월은 1차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④ 특징 : 계속비나 예비비도 요건을 갖추어 이월가능하며, 추가경정예산도 이월할 수 있음. 다만 이월된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계속비	① 의의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자금으로 당해 연도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음(한정성의 원칙의 예외) ② 관리 : 매년의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함 ③ 체차이월 : 승인받은 계속비의 연부액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계속비 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해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④ 장·단점 :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은 장점이나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
예비비	① 의의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상당한 금액(한정성·사전의결·명확성의 원칙 예외) ② 사용의 제한 : 국회에서 부결한 용도, 국회 개회 중 거액의 지출(개회 중에는 추가경정예산 사용), 예산 성립 전부터 존재하던 사태에 대한 사용은 자제해야 함 ③ 범위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 ④ 유형 : 일반예비비(일반적인 지출 소요에 충당), 목적예비비(특정목적에 충당하는 예비비로 봉급예비비, 공공요금예비비, 재해대책예비비 등) ⑤ 관리 : 기재부장관이 관리하며 개별부서의 요구에 의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건별로 지출 ⑥ 통제 : 예비비의 설치시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요함 ⑦ 기타 : 헌법상 독립기관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제도가 인정됨
국고채무 부담행위	① 의의 : 법률이나 세출예산, 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외상 공사 등 장래 국고부담이 예정되는 행위) ② 통제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③ 특징 : 국회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한 것이지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지출을 하려면 다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수입대체 경비	① 의의 :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해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등기소 등·초본 발행경비, 외교부의 여권 발급 경비 등) ② 특징 :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국고통일주의·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임
장기계속 계약제도	단년도 예산이 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나 물품의 제조로서 전체 사업내용과 연차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총공사 또는 총제조의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할 공사 또는 제조의 발주를 허용하는 제도
국고 여유 자금 활용	국고금의 출납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내에 한하여 정부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일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세출예산과 상관없이 운용 가능함)
조상충용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의 세입을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한정성의 원칙의 예외)
기타	수입과 지출의 특례, 정기배정의 예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 준예산(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 추가경정예산(한정성의 원칙의 예외)

문 16.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②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정답] ③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고 있다.

<<핵심체크>> 윤리규범(하이패스 행정학 p235)

적극적 윤리규범	공무원 윤리 현장	①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 ② 국민에는 정직과 봉사, ③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 ④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 ⑤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
	특징	적극적·추상적 윤리규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
소극적 윤리규범	국가 공무원 법	① 기본의무 : 성실의무 ② 직무상 의무 :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공정성의무, 영리·겸직의 금지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③ 신분상 의무 : 비밀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예 등 제한, 정치적 중립의무, 집단활동금지의무
	공직자 윤리법	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4급 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및 공개의무(1급 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 법관, 검사, 공기업 및 국가유관기관의 임·직원, 일부 부패소지가 큰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②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신고 ③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음 ④ 이해충돌방지의무 ⑤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① 부패신고 의무, ②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퇴직전 3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관련된 영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 간 취업할 수 없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역신고 의무
	공직자행동강령 (대통령령)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반시 징계처분을 규정함
특징	소극적 구체적 윤리규범, 타율적이지만 구속력과 실효성이 높음	

문 17.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고보조금제도와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 ② 지방교부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법정되어 있다.
- ③ 보통교부세는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일반재원이다.
- ④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정답] ② 지방교부세는 명칭으로 인하여 조세로 오인될 수 있지만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아닌 의존재원 중에 하나이다.

<<핵심체크>> 지방교부세(하이패스 행정학 p892)

개념	경제력을 달리하는 자치단체에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로서 징수한 재원을 일정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주는 제도		
성격	① 수평적·수직적 재정조정제도, ② 공유된 독립재원(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재원), ③ 일반재원, ④ 무대응지원금		
유형	보통 교부세	의의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교부세로 용도가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며, 조건의 제한이 없는 무대응지원금
		재원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100
		산정 기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재정부족액)을 법률로 정해진 보통교부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분기별로 교부
		특이 사항	•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일괄하여 교부함 • 재정력지수가 1이상인 자치단체에는 교부되지 않음(서울·경기·수원 등 10여개)
	특별 교부세	의의	특별한 재정적 수요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해 주기 위해 교부되는 특정재원
		재원	내국세 총액이 19.24% 중 3/100
		교부 기준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③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 운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부동산 교부세	의의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대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고 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재정확충재원으로 사용하는 일반재원
		교부 기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소방 안전 교부세	의의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일반재원
		재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문제점		교부 기준	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부
		문제점	① 재원보장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 ②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어려움, ③ 투자지출로 활용하기 보다는 소모적인 경상경비로 활용, ④ 낮은 법정교부세율, ④ 교부'세'라는 명칭으로 조세로 오인될 가능성 등

<<핵심체크>> 사회적 자본(하이패스 행정학 p159)

개념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신뢰(믿음), 호혜성의 규범(규율), 시민참여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속성
이론적 기초	공동체주의와 뉴거버넌스론
성질	① 공공재적 성격 :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② 자기강화적 성격 : 사용할수록 증가, 사용하지 않을수록 감소 ③ 비(非)등가적 교환관계 :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통해 유지되고 재생산되나 사용한 만큼 동등한 가치를 지불해야만 하는 등가적 교환관계가 아니며 시간적으로 동시적 교환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님. ④ 상향적 형성과정 :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환관계에 의한 형성
순기능	① 거래비용감소를 통한 경제발전의 원동력 ②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을 통한 진정한 자치 실현 ③ 효과적인 사회적 체재력을 제공하여 공유지의 비극 극복 ④ 정책에 대한 순응도 향상 및 가외적 장치의 필요성 감소
역기능	① 사적신뢰 - 집단 간 균열이나 갈등 촉진 ② 공적신뢰 - 집단규범 강요수단 : 동조성을 요구하여 개인의 사적 선택 제한 ③ 형성과정의 불투명성 및 측정의 곤란성

문 19.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성공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적 지식의 창출보다는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지식 축적을 강조한다.
- ② 개인 또는 부서가 업무결과로 얻은 새로운 지식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 ③ 지식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구조를 정비한다.
- ④ 지식관리의 촉진제이자 실질적인 도구인 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답] ①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지식을 조직의 보편적 지식(조직적 지식의 창출)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이 있다.

<<핵심체크>> 지식관리(하이패스 행정학 p203)

구조	학습조직화(탈관료제화)
인	최고지식담당관(CKO) 임명 및 지식근로자의 양성
문화	실패를 용인하고 학습하는 문화, 지식을 공유하는 협력적 문화 등
기술	표준화 정립을 통한 호환성·연계성 확보로 지식 공유(지식관리시스템 구축)
관리	암묵지의 형식지화를 통한 조직의 지식 증폭

문 20.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적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 ② 공리적·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조절,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개혁이 가져오는 가치와 개인적 이득의 실증 등이 있다.
- ③ 규범적·사회적 방법에는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등이 있다.
- ④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리적·기술적 방법이다.

[정답] ④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규범적·사회적 방법이다.

<<핵심체크>> 행정개혁 저항 극복방안(하이패스 행정학 p243)

규범적·협조적 전략	① 충분한 시간적 여유 제공 ① 의사소통의 개선 및 참여의 확대, ② 정보 제공 및 설득, ③ 집단토론 및 사전훈련, ④ 개혁지도자의 신망과 카리스마 및 상징 활용
기술적·공리적 전략	① 개혁의 점진적인 추진 ① 개혁에 유리한 시기의 선택, ② 개혁안의 명확화와 상징조작을 통한 공공성 강조, ③ 신속적인 인사배치, ④ 개인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 ⑤ 개혁의 방법과 기술을 융통성 있게 활용, ⑥ 호혜적 전략의 활용(조건부 지원 등)
강제적 전략	① 압력의 사용, ① 의식적인 긴장 조성, ② 계층제 상의 권한 사용

문 18.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과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 ②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에 따라 강조되었다.
- ③ 주요 속성으로는 상호신뢰, 호혜주의, 적극적 참여 등이 있다.
- ④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하여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②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호혜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에 따라 강조되었다.